

# 농업 6차 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AHP를 이용하여

박정일<sup>1</sup> · 이도경<sup>2</sup> · 김성훈<sup>2\*</sup>

<sup>1</su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정투자분석본부, <sup>2</sup>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Analysis on the priority of policy programs for 6<sup>th</sup> industrialization in agricultural sector: using AHP

Jeong-Il Park<sup>1</sup>, Do-Kyung Lee<sup>2</sup>, Soungun Kim<sup>2\*</sup>

<sup>1</sup>Office of R&D Budget and Feasibility Analysis,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Seoul, 06775, Korea

<sup>2</sup>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Received on 11 November 2015, revised on 30 November 2015, accepted on 10 December 2015

**Abstract** : The 6th industrial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for Korean agricultural sector, and Korean government allocates the large portion of policy budget to promote the 6th industrialization. However,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experienced the confusion and inefficiency due to too many policy programs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policy programs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to suggest the several guidelines for the more efficient policy system, including the priority of policy programs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The results of studies present a few findings as follows: First, Korean government should evenly promote the 1st, 2nd, and 3rd industry in agricultural sector. Second, the main agent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needs to b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ird, the policy resource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prominent farmers or enterprises. Forth, the policy programs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need to be grouped.

**Key words** : 6th industrialization, AHP, Priority, Korean government

### I. 서론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주창된 6차 산업화는 농업이 1차 산업(농축산물의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2차 산업(농축산물의 가공 및 식품제조업) 및 3차 산업(도·소매업, 음식업, 정보서비스업, 관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농기업의 다각화와 농업의 종합산업화(1차 × 2차 × 3차 = 6차)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 목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1차 생산업인 농림축산업에 2차 식품가공산업 등을 결합시켜 농가 수취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물론, 지

방자치단체들이 각각 다양한 관련 정책 사업들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6차 산업 정책들을 추진하다보니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조율되지 못하고 사업 성격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6차 산업화의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부서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 등으로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6차산업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 6차 산업화 정책의 우선 순위 등을 정립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었는데, Kim 등(2011)과 Yu(2011)은 일본의 농림수산업과 경제산업성이 2008년부터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상·공 연대와 2010년 12월에 관련법이 통과된 6차 산업화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우리나라 관련 정책 수립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Jang 등(2011)은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821-6741

E-mail address: soungunkim@hotmail.com

농업과 2·3차 산업이 융합된 농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과 2·3차 산업 융합 경영모델을 제시하였고, Kim 등(2013)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6차 산업화 정책을 분석하고 충청남도의 6차 산업화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6차 산업화에 대한 개념 분석과 전반적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용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하였으나,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6차 산업 정책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선 순위 등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차 산업화 정책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관련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 6차 산업화 정책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세부 사업들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 중요도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연구 방법과 기본 개요에 대해 논의하였고, 3장에서는 농업 6차 산업화 정책의 우선 순위 등을 AHP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4장에서는 전체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II. 연구방법<sup>1)</sup>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시행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6차 산업화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장 면담 조사와 인터넷 메일을 통한 서면 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광역 지자체와 양 청(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해당 사업 담당자, 관련 연구자, 사업 수혜자의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30여 명씩으로 구성되어 총 90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AHP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AHP 분석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고,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기법으로 1970년대 초 토마스 사티(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인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AHP 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AHP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한다는 점, 그리고 평가요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대안들의 선호도를 비율척도로 측정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척도 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첫째, 의사결정요소들을 계층화하는 단계로써 최상위 계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목표가 주어지고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보다 상세한 의사결정 요소들이 분해된다. 이때 계층 간의 의사결정 요소들은 종속적 관계, 같은 계층의 요소들끼리는 독립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요소들을 두 개씩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자의 선호(preference)정도를 Saaty에 의해서 제안된 9점 척도에 의해서 적정한 수치로 수량화한다.

셋째, 고유 벡터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 간의 상대적 가중치(weight)를 추정하는데,  $A \cdot W = \lambda_{\max} \cdot W$  (여기서  $A$ 는 쌍대비교로 얻어진 정방행렬을 나타내고,  $\lambda_{\max}$ 는  $A$ 의 최대고유치(maximum eigenvalue),  $W$ 는 고유벡터이다)의 식을 통해 고유벡터  $W$ 가 구해지면  $W$ 의 각각의 성분을  $\sum W_i$ 로 나눔으로써 정규화(normalized)된 가중치를 얻을 수 있다.

넷째, AHP의 마지막 단계는 최하위 계층에 있는 대안들의 상대적 비중 또는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해 각 계층에서 계산된 평가기준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aggregation)하는 과정이다. 최상위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문제의 가장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최하위 계층에 있는 대안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안들의 종합가중치(composite relative weights)를 구하는 단계이다. 대안의 종합가중치는  $W_i = \sum (w_j)(u_{ij})$ 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1) 연구방법의 AHP 분석법은 Geoff C. (2015)를 참고하여 작성됨.

( $W_i$ 는  $i$ 번째 대안의 종합가중치이고  $w_j$ 는 평가기준  $j$ 의 상대적 가중치,  $u_{ij}$ 는 평가기준  $j$ 에 대한  $i$ 번째 대안의 가중치를 각각 의미한다). 이들 대안의 종합가중치는 대안의 상대적 비중 또는 우선순위라고도 하며, 대안 선택 또는 자원배분의 기초를 제공한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사업 추진 대상의 우선 순위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AHP 분석 결과 문항별로 전문가 7명 - 17명의 유효 샘플이 추출되었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sup>2)</sup> 부문별로 보면 업계 샘플의 전문가 설문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모든 부문에서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6차 산업화 정책을 2차와 3차로 나뉘어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육성할 지에 대해서는 3개 부문 모두 특정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전체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차 순위 응답으로는 2차 가공산업을 3차 서비스업보다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기에,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방향을 1·2·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되 2차 가공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 2. 사업별 필요성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세부 사업별 필요성을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up>3)</sup>로 분석한 결과가 Fig. 1부터 Fig. 3까지 제시되어 있다. 모든 정책 사업들이 보통(3점) - 매

**Table 1.** Priority of the programs for the 6<sup>th</sup> industrialization.

전문가 그룹	2차 산업 우선 육성	3차 산업 우선 육성	1·2·3차 고르게 육성
업계	0.397	0.147	0.457
연구계	0.365	0.156	0.479
지자체	0.256	0.235	0.509

2) AHP 분석 결과의 CR(consistency ratio) 값은 모두 0.1이하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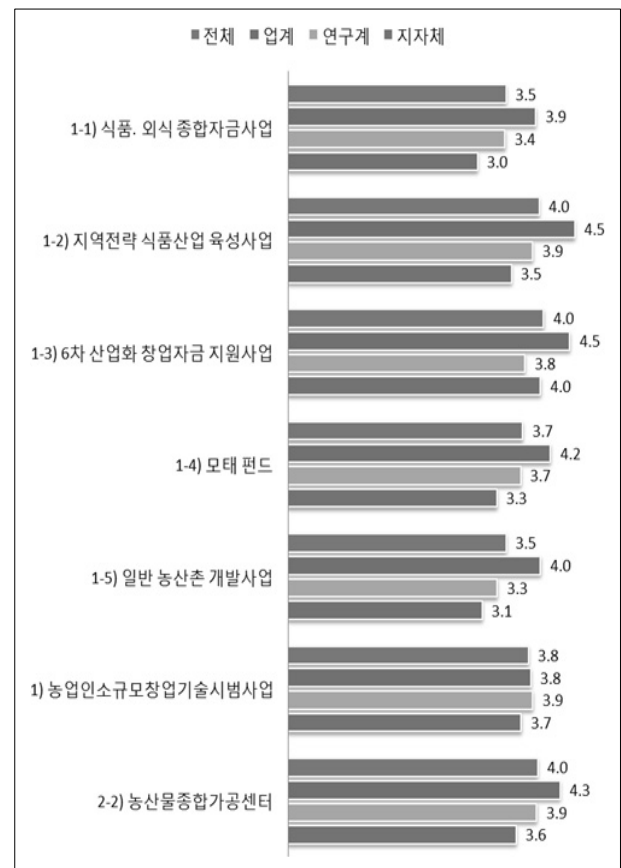
3) 세부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는 매우 불필요(1점), 불필요(2점), 보통(3점), 필요(4점), 매우 필요(5점)로 구성됨.

우필요(5점) 구간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사업별 상대적 필요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먼저 2차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과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 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기되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업계의 전문가는 농촌진흥청의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계나 지자체 전문가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과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 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계 전문가는 농촌진흥청의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을 업계나 지자체 전문가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과 농산물중



주: 사업 명의 앞 숫자 중 1은 농식품부, 2는 농진청, 3은 산림청의 사업을 지칭하고, 뒤의 숫자는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일련번호임.

**Fig. 1.** Necessity of the policy programs: 2<sup>nd</sup> industry.

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지자체 전문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 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다.

3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과 6차 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기되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업계 전문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과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사업, 6차 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 산림청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서 연구계나 지자체 전문가에 비해 높은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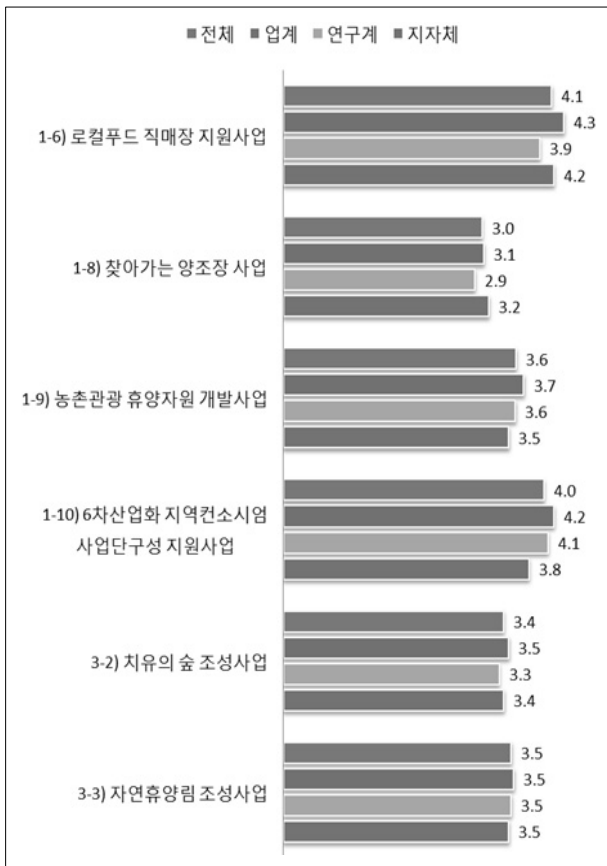
연구계 전문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자체 전문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찾아가는 양조

장 사업에서 업계나 연구계 전문가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한편 복합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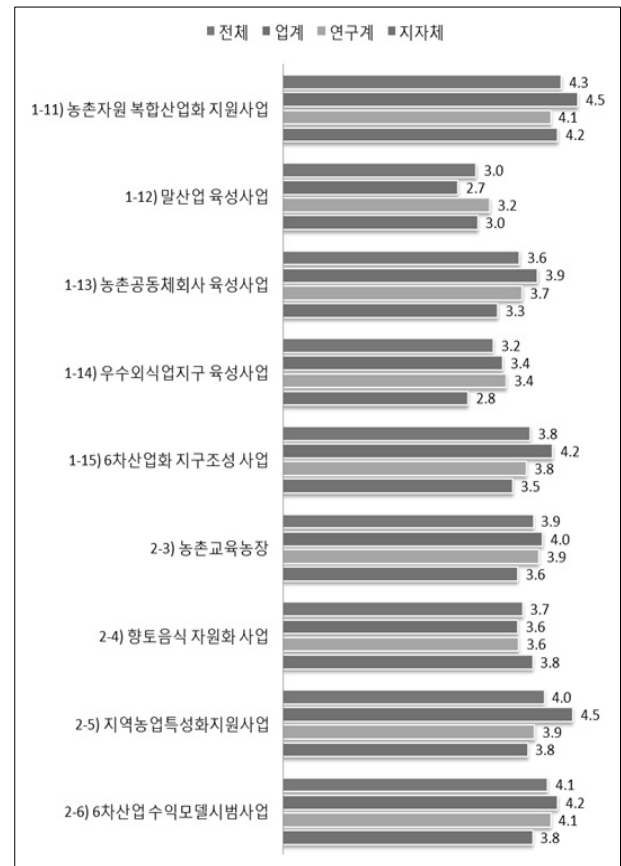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보면, 업계 전문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교육농장 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서 연구계나 지자체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계 전문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육성사업이 업계나 지자체 전문가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주: 사업 명의 앞 숫자 중 1은 농식품부, 2는 농진청, 3은 산림청의 사업을 지칭하고, 뒤의 숫자는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일련번호임.

Fig. 2. Necessity of the policy programs: 3<sup>rd</sup> industry.



주: 사업 명의 앞 숫자 중 1은 농식품부, 2는 농진청, 3은 산림청의 사업을 지칭하고, 뒤의 숫자는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일련번호임.

Fig. 3. Necessity of the policy programs: complex programs.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농촌진흥청의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자체 전문가는 농촌진흥청의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에서 업계나 연구계 전문가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목된다.

### 3. 사업 주제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을 시행하는 주체들 중 누가 주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분석 결과, 업계 전문가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개별 사업을 시행하거나 농식품부의 사업 기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행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0.447)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연구계 전문가는 농식품부가 농식품부의 전체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사업 시행만 담당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나(0.286),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은 감독만 하고, 지자체가 사업 기획 및 시행을 주도하는 방식도 차순위로 적절한 것(0.274)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 전문가는 농식품부는 감독만하고, 농진청, 산림청이 사업을 기획하여 지자체는 사업 시행만 담당하거나 (0.300),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은 감독만 하고, 지자체가 사업 기획 및 시행을 주도하는 것(0.292)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 대상들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사업의 세부 추진 방향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의 세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먼저 지원 대상 업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업계와 연구계 전문가가 모두 대상 업체를 선정한 다음 이를

**Table 2.** Appropriacy of the main agent for policy.

전문가 그룹	현행 방식	농식품 총괄	농식품 감독	지자체 사업기획
업계	<b>0.447</b>	0.275	0.147	0.132
연구계	0.231	<b>0.286</b>	<b>0.209</b>	0.274
지자체	0.197	0.211	0.300	0.292

집중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6차 산업화를 위한 업체 지원이 목표한 성과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반면, 지자체 전문가는 가능한 많은 업체를 고르게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관할내의 모든 관련 업체들을 관리하여야하는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6차 산업화 정책의 지원 기간은 업계, 연구계, 지자체 전문가 모두 다년도 지원을 통한 장기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을 다년차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사업을 시장 확대와 산업의 생산 부문 경쟁력 제고

**Table 3.** Main strategy for the 6<sup>th</sup> industrialization.

구분	세부 내용		
업체 선정	전문가 그룹	대상 업체 선택 후 집중지원 중심	고르게 많은 업체 지원 중심
	업계	<b>0.801</b>	0.199
	연구계	<b>0.624</b>	0.376
	지자체	0.415	<b>0.585</b>
지원 기간	전문가 그룹	1년 이하 단기 지원 중심	2년 이상 다년도 지원 중심
	업계	0.163	<b>0.837</b>
	연구계	0.188	<b>0.812</b>
	지자체	0.216	<b>0.784</b>
지원 부문	전문가 그룹	상품의 소비 확대 중심	생산부문 경쟁력 제고 중심
	업계	<b>0.559</b>	0.441
	연구계	<b>0.641</b>	0.359
	지자체	<b>0.659</b>	0.341
지원 대상	전문가 그룹	현장 애로해결 중심	연구개발 중심
	업계	<b>0.572</b>	0.428
	연구계	<b>0.821</b>	0.179
	지자체	<b>0.725</b>	0.275
사업 성격	전문가 그룹	보조사업 중심	융자사업 중심
	업계	<b>0.808</b>	0.192
	연구계	0.422	<b>0.578</b>
	지자체	0.361	<b>0.639</b>
자부담 비중	전문가 그룹	자부담 비중 축소	자부담 비중 확대
	업계	<b>0.672</b>	0.328
	연구계	0.357	<b>0.643</b>
	지자체	0.440	<b>0.560</b>

중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업계, 연구계, 지자체 전문가 모두 상품의 소비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이 연구개발(R&D) 사업에 우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접목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쉽게 적용되는 기술을 가지고 소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의 성격과 자부담 비중에 대해서는 업계와 연구계 및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이 대조를 보였다. 즉, 업계 전문가는 보조사업과 자부담 비중 축소를 선호한 반면, 연구계와 지자체 전문가는 융자사업과 자부담 비중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계 전문가의 응답 결과는 업체들의 여건에 따른 것이기에,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이 융자 사업과 자부담 비중 확대 중심으로 추진되어 업체의 책임감을 높이고, 한정된 사업 예산의 지원 가능 범위를 넓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5. 사업 구조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의 향후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분석 결과, 6차 산업화 정책의 경우 업계, 연구계, 지자체 전문가 모두 기존의 사업들을 4 - 6 개 중형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업 수가 너무 많아 일선에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들에서 진행되는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지자체장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은 경우, 소형 규모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은 농식품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4. Grouping of policy programs.

구분		세부 내용		
		기존 23개 사업 유지	4~6개 중형사업으로 통합	1~3개 대형사업으로 통합
6차 산업화 정책	전문가 그룹			
	업계	0.210	<b>0.527</b>	0.262
	연구계	0.175	<b>0.605</b>	0.221
	지자체	0.247	<b>0.505</b>	0.248

## IV. 결론

농업이 1차 생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2차 농축산물의 가공 및 식품제조업 및 3차 도·소매업, 음식업, 정보서비스업, 관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농기업의 다각화와 농업의 종합산업화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활동인 6차 산업화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 목표의 하나로 제기되어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기관들이 의욕적으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조율되지 못하고 사업 성격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저해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6차 산업화 정책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관련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방향을 1·2·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되 2차 가공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여 정책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부문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제시되었다.

사업의 중심 추진 주체는 응답 전문가 그룹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농식품부가 주도하고 타 기관들이 협력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또한, 사업 추진 방식은 선택을 통해 대상 업체를 선정한 다음 이를 장기간동안 집중 육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다수의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체계를 보완하여 4 - 6개의 중형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대상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못한 우리나라 6차 산업화 정책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후속 연구에 상당히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농림축산식품부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11-1543000-000704-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 문헌

- Geoff C. 2015. Practical Strategy, Open Access Material, AHP.
- Kim SH, Ahn DH, Kook SY. 2013. Strategy for the 6<sup>th</sup> industrialization in ChungNam province. ChungNam Institute. [in Korea]
- Kim YR, Huh JN, Lee EK. 2011. Introduction of the 6<sup>th</sup> industrialization in Japa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Korea]
- Jang HD, Kim SH, Song JE, Son KS, Cho HJ.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6<sup>th</sup> industrialization in agricultural sector.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Korea]
- Yu HY. 2011. Trend of policy for the 6<sup>th</sup> industrialization in Japan. ChungNam Institute. [in Korea]